

# 잇단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포비아’ 확산

# 40대 주부 A씨는 최근 가입했던 쇼핑물·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쿠팡을 비롯해 통신사 등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는 “쿠팡뿐 아니라 통신사에서도 개인정보가 계속 새어 나온다고 하니 어느 플랫폼도 믿을 수 없다”며 “혹시 내 정보도 이미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 30대 남성 B씨는 최근 쿠팡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지만 쿠팡에서는 이렇다 할 안내나 양해를 구하는 연락을 받지 못해서다. 고객센터도 사과 한마디 없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에 B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 통신사·금융기관 이어 온라인 쇼핑물까지 피해 커져 낙장·안일 대응에 회원 탈퇴 속출·집단소송 움직임도

잇따른 해킹사고로 광주·전남 지역민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형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이어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물인 쿠팡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되자 시민들은 “이제는 어떤 플랫폼도 믿을 수 없다”며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우고 결제 정보를 차단하는 등 방어에 나서고 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쿠팡에서 고객 계정 3370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뛰어넘는 규모로 추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통신,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지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광산구에서 거주하는 직장인 정지민씨(28)는 쿠팡 와우 멤버십을 탈퇴하고 ‘로켓배송’으로 배송 예정이던 식료품 주문도 취소했다.

정씨는 “내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새어나간 건지 알 길이 없다. 일단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삭제부터 하고 봤다”며 “2차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쿠팡의 낙장 대응과 ‘결제 정

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안전하다’는 일관 태도에 분노했다.

최수지씨(40·여)는 “유출이 5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미 내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쿠팡 홈페이지에도 관련 안내 등이 전혀 없고 문자 한 통만 달랑 보내왔다. 이게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물이 할 수 있는 대응인가 싶다”고 한탄했다.

특히 통신사·금융사·쇼핑물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해킹과 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상시 위험’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 시 등락한 개인정보와 은행·카드 등 금융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쇼핑·배달·택배 서비스에서 장된 이름·주소·구매 패턴까지 털리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전화가 갑자기 늘었다’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에 정보 당국은 사고 경위 확인과 재

발 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안 강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당국 발표와 달리 해킹 피해 알림이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기업의 사과 공지 또한 이메일 한 통이나 ‘앱 팝업’ 수준에 그치는 등 형식적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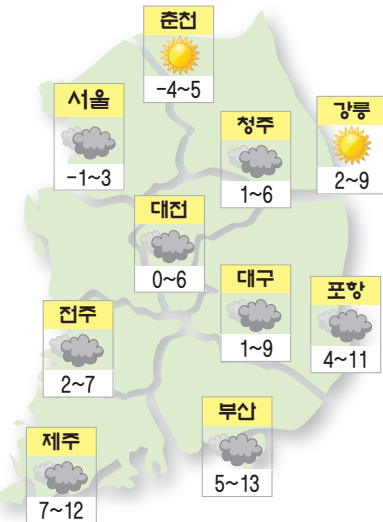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단체 소송 준비’라는 이름의 한 오픈 채팅방에는 3000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다. 수천 명이 넘게 가입한 단체 소송 카페에서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다는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편 고객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출처불명 URL 클릭 금지 △의심 사이트 주소는 정상 사이트와 비교 △개인정보는 반드시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 △결제 인증번호는 재확인 후 입력할 것을 권고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       |    |       |
|----|-------|----|-------|
| 예보 | 07:23 | 달빛 | 14:56 |
| 해진 | 17:20 | 달진 | 03:52 |



|    |  |      |
|----|--|------|
| 광주 |  | 2~8  |
| 목포 |  | 2~8  |
| 여수 |  | 4~11 |
| 순천 |  | 2~11 |
| 구례 |  | 1~10 |
| 광주 |  | 1~9  |
| 진도 |  | 3~11 |
| 목포 |  | 7~10 |
| 고흥 |  | 1~11 |
| 진도 |  | 4~9  |

|    |       |               |
|----|-------|---------------|
| 목포 | 미물(고) | 11:39 / 23:47 |
|    | 샘물(저) | 04:34 / 17:15 |
| 여수 | 미물(고) | 06:44 / 18:54 |
|    | 샘물(저) | 00:13 / 12:44 |

## 10년간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4명 기소

### 임금 수천만원 빼돌려… 염전주 주변인도 ‘재판행’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편취한 전직 염전주와 천동생, 지인 등 주변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신안의 전직 염전주 A씨(59)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의 동생 B씨(57)와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62)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도 변

호사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E씨(65)에게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E씨 통장에 월급 등을 입금한 것처럼 꾸미지만 실제로는 A씨 가족이 해당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천동생인 B씨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염전에서 근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에게 병원 인근 건물 3층의 방 1칸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인 D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 까지 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E씨 진술을 조작하도록 회유하거나 E씨 행방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임영진 기자 looks@

## 광주교육청, 3~14일 헌법·민주주의 수호 기간

### 12·3 비상계엄 1년

광주시교육청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오는 3~14일 ‘2025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학생과 교직원에게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벌어진 헌정 위기 상황을 바르게 알리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다.

시교육청은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광주 초·중·고 전체에 ‘2025년 헌

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 운영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 현장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현수막 게시, 사회·도덕·역사 교과 및 찾은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계기교육, 토론·캠페인·자치활동 중심 프로그램, 헌법 수호 실천 다짐 작성, 헌법 필사 등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관련 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2024년 12월 개발했던 ‘비상계엄 관련 교사용 도움자료’와 새로 제작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카드

뉴스’ 등을 보급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일 헌법 수호 선포식, 특별강연, 교직원 연수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오는 12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교직원 대상의 연수가 진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 광주지역 중·고교생 7000명이 시국선언문을 냈었다”며 “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늦가을 풍경 1일 광주 동구 중앙로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수북이 쌓인 은행잎 위를 지나가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새벽 칼바람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 겨울철 물량 줄고 가격까지 하락…“생계 막막”

### kg당 50원 매입…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하루 노동

### “경기침체로 박스가 안 나와”…현장 체감경기 ‘빨간불’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지역업 불황으로 ‘주을 폐지’ 자체가 줄어든 데다 매입 단가마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하루 수입이 국밥 한 그릇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1일 오전 7시께 찾은 광주 동구의 한 고물상.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폐지를 실은 수레와 리어카가 끊임없이 들어섰다. 이 고물상에는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면 평일 기준 하루 30~40명의 고령

층이 꾸준히 폐지를 반입한다. 날씨가 추워도 이른 새벽부터 어르신들이 몰리는 이유는 새벽에 나가야 조금이라도 더 폐지를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폐지 매입 단가는 kg당 50원. 이날 리어카를 끌고 온 김모씨(93)가 내려놓은 폐지는 150kg. 성인 남성 2명 몸무게에 해당하는 양이었지만 손에 쥔 돈은 고작 7500원이었다. 그는 전날부터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수입은 1만원에도 못 미쳤다. 시내 국밥집 한 끼가 1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을 감안하면 ‘끼니

해결’조차 부담되는 셈이다. 김씨는 “요즘은 동네에서 박스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며 “가게 문 닫는 데도 많고, 문을 열어도 물건이 안 팔리니 박스가 예전만큼 나오질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가끔 주민들이 따로 모아둔 폐지를 건네줄 때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이날 고물상을 찾은 박모씨(78)도 “폐지를 수거한 지 13년째인데 이제 리어카 무게가 버겁다”며 접이식 수레로 하루 3~4차례 이곳을 찾는다. “다른 일을 구할 수 없으니 폐지를 계속 줍는다”는 그는 “가격은 해마다 내려가고 물량도 줄어 이제 하루 벌이가 1~2시간 시급에도 못 미친다”고 토로했다.



1일 오전 7시 광주 동구의 한 고물상에 노인들이 주운 폐지를 리어카에 담아 들어오고 있다.

폐지가격 하락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폐지(신문지 기준) 가격은 127.5원으로 올해 1월(162원) 대비 약 27%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골판지 가격은 128.3원에서 85.3원으로 급락했다. 코로나19 이후 물류 증가로 일시적으로 올랐던 폐지 수요가 둔화된 데다, 글로벌 제지 제조업 불황

이 장기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폐지 배출량 감소도 고령층 소득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골목 상권 침체로 박스 발생량이 줄면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경쟁까지 치열해졌다. 한 수거자는 “예전에는 오전에도 박스를 제법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새벽이 아니면 아예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물상 업주 이경찬씨(52)는 “폐지를 가져오는 분들 대다수가 생계형이라 하루 반입량이 줄면 바로 생활비가 부족해진다”며 “가격도 오를 기세가 없고 물량도 줄어 상황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폐지 수거가 고령층의 대표적인 생계 수단임에도 구조적 시장 변화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대체 소득원 발굴과 지역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폐지 수거는 고령층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경기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돌봄 연계형 일자리 등 지역 기반의 보안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재용 인터넷기자 djawody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